

# 문지마 방류 기사다, 괴담 처벌 윤석열

## 핵 폐수 투기 중단하라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개시했다.

그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알프스ALPS라는 장비를 통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거나 바다에 방류하면 방사성 물질이 희석될 수 있다 주장해왔다.

방사성 물질 제거 장비는 검증된 적도 없다. 게다가 바다에 버리는 방사성 물질은 생체에 농축될 수 있고 총량에 변화도 없다.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들은 이런 일본 측 자료와 주장이 엉터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강경하게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기사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방류를 통해 덜어내고, 이 기회에 '핵은 안전하다'고 설파하려 한다.

### 핵 폐수 투기 공범

그 시점이 다름 아닌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라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사실상 한미일 정상회담이 핵 폐수 방류의 최종 조율 장이었던 셈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의 핵심 동맹인 일본이 대중국 견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서로 화답이라도 하듯,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고, 미국 정부는 2021년부터 핵 폐수 방류 지지 입장을 내왔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하위 파트너로 미일 동맹에 적극 공조해왔다. 상반기 내내 (심지어 광복절 당일까지!) 일본이 이제 파트너라고 강조하더니 일본의 핵 폐수 방류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일찍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예산으로 일본 핵 폐수 방류의 안전을 홍보하며 방류를 지지했다.

이런 상황은 핵 폐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지 역시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 강화에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런 미국의 패권 전략에 호응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한국에서도 '핵은 안전하다'는 설파를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핵 폐수 방류 지지와 한미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면서 섬뜩한 상황 전개다.

이처럼 핵 폐수 동맹은 핵발전 확산 동맹이 될 것이고, 핵전쟁 동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현재와 미래의 보통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폭탄 투하의 피해를 전쟁 발발에 아무 책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져야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 폐수 반대 운동이 '북한 긴급 지령'의 일부라며 폄훼하고 있다. 전형적인 색깔론 공격이다. 핵 폐수 방류 반대 등 반정부 저항을 위축·분열시키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와 그에 대한 지지는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이고, 반환경적이다. 일본 정부와 이를 동조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방류가 결코 끝이 아니다. 밸브를 다시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핵 폐수 동맹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모든 한미일 공조 노력에 반대하자.

2023년 8월 31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 이 글은 방류 전인 23일 발표한 성명을 수정한 것이다.

▶ 추천 영상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youthstu @ws\_youthstu  
010-5443-2395 https://youth.workerssolidarity.org



# 후쿠시마 방류 기사다

## 핵 폐수 투기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개시했다.

그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알프스ALPS라는 장비를 통해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거나 바다에 방류하면 방사성 물질이 희석될 수 있다 주장해왔다.

방사성 물질 제거 장비는 검증된 적도 없다. 게다가 바다에 버리는 방사성 물질은 생체에 농축될 수 있고 총량에 변화도 없다.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들은 이런 일본 측 자료와 주장이 엉터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강경하게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기사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방류를 통해 덜어내고, 이 기회에 '핵은 안전하다'고 설파하려 한다.

# 핵 폐수 방류, 고담 처벌 윤석열

## 기 중단하라

핵 폐수 방류 지지와 한미간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면서 섬뜩한 상황 전개다.

이처럼 핵 폐수 동맹은 핵발전 확산 동맹이 될 것이고, 핵전쟁 동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현재와 미래의 보통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폭탄 투하의 피해를 전쟁 발발에 아무 책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져야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 폐수 반대 운동이 '북한 긴급 지령'의 일부라며 폄훼하고 있다. 전형적인 색깔론 공격이다. 핵 폐수 방류 반대 등 반정부 저항을 위축·분열시키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와 그에 대한 지지는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이고, 반환경적이다. 일본 정부와 이를 동조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핵 폐수 투기 공범

그 시점이 다름 아닌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라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사실상 한미일 정상회담이 핵 폐수 방류의 최종 조율 장이었던 셈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의 핵심 동맹인 일본이 대중국 견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서로 화답이라도 하듯,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고, 미국 정부는 2021년부터 핵 폐수 방류 지지 입장을 내왔다.

한국 윤석열 정부는 하위 파트너로 미일 동맹에 적극 공조해왔다. 상반기 내내 (심지어 광복절 당일까지!) 일본이 이제 파트너라고 강조하더니 일본의 핵 폐수 방류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일찍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예산으로 일본 핵 폐수 방류의 안전을 홍보하며 방류를 지지했다.

이런 상황은 핵 폐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지 역시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 강화에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런 미국의 패권 전략에 호응해서 한국 자본주의가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한국에서도 ‘핵은 안전하다’는 설파를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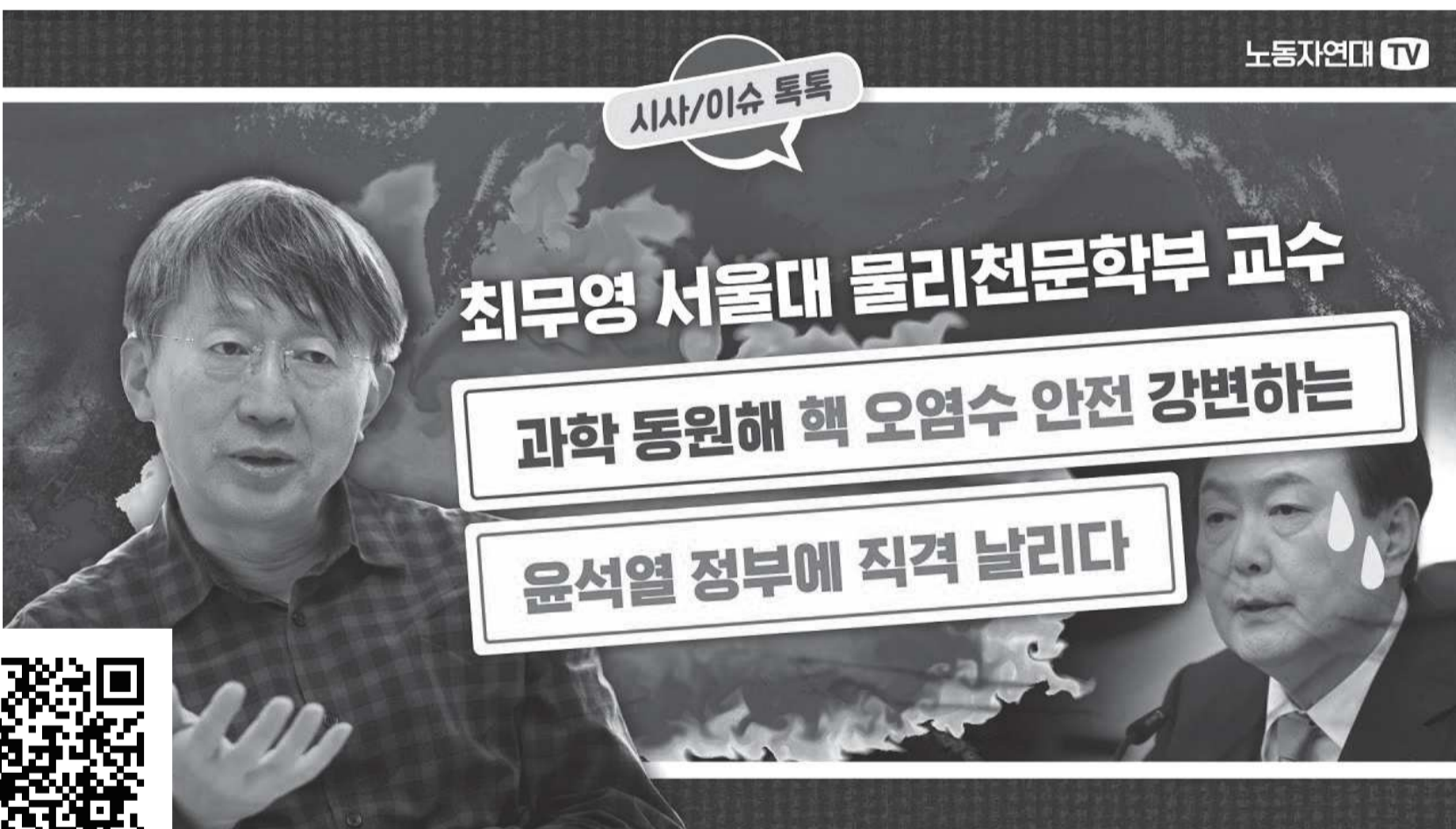
방류가 결코 끝이 아니다. 밸브를 다시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핵 폐수 동맹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모든 한미일 공조 노력에 반대하자.

2023년 8월 31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 이 글은 방류 전인 23일 발표한 성명을 수정한 것이다.

 추천 영상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youthstu  @ws\_youthstu  
 010-5443-2395  <https://youth.workerssolidarity.org>

